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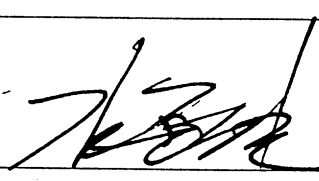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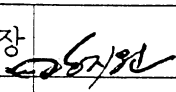



국무총리 정 소년보호위원회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 전화 (02) 3703-2072~5 / 전송 735-2644
 보호기준과 과장 천상기 담당사무관 김석병

문서번호 기준 82590-

시행일자 1999. 2. 26. ()

수신처 수신처참조

취급		국무총리
보존		
위원장		
사무국장		
●과장		
★기안	김석병 	
		협조

제목 :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대책지시 (국무총리 지시99-6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98. 9. 15. 일반음식점업 등의 심야 영업시간제한 해제에 이어 금년 3. 1.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을 초기에 차단, 건전한 심야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심야영업 전면 허용에 따른 대책을 지시하니 소관부처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불임 :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 허용에 따른 대책지시 1부. 끝.

국무총리

수신처 : 가(34, 36, 37, 43, 45, 52, 56, 58), 나

	실 장	재가문서 요약전	
조정관			
김덕봉	김재우		
국무조정실			

제목 :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대책 지시

1. 배 경

- 심야영업 허용 2단계 조치시행 ('99. 3. 1.)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2. 예상되는 문제점

- 심야 치안불안요인 증가
- 퇴폐·변태업소 확산
- 10대 청소년 불법고용 등

3. 지시사항

- 소관부처별 「특별대책」 수립·시행
- 1개월간 일제 특별단속 실시 (3. 1. ~ 3. 31.)
- 중점 단속대상
- 불법 영업행위 등 처벌강화
- 학생 등 청소년 교육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

4. 행정사항

- '99. 4. 15. 까지 특별단속 결과보고
- 「중앙점검단」 전국 현장점검 실시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대책지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발생을 초기에 차단하고 건전한 심야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

I. 배 경

- '98. 9. 15. 일반음식점업 등의 심야영업에 대한 해제에 이어 '99. 3. 1. 전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대한 심야영업제한 전면해제

※ 무도장업은 현행 17:00~23:00에서 17:00~익일09:00로 일부 시간 확대

- 심야영업 허용으로 유흥가의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음주·향락풍조의 확산과 손님유치를 위한 업소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 시행초기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필요

II. 예상되는 문제점

○ 심야 치안불안요인 증가

- 유흥업소 중심으로 폭력등 범죄유발요인 증대
- 취객 상대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 유흥업소 이권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발호
- 취객들의 질서문란행위 증가 등

○ 심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 취객들의 심야 음주운전
-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퇴폐·변태업소 확산

- 업종간 경쟁심화로 단란주점, 카페, 노래방 등의 불법 접대부 고용 및 변태영업 증가
- 업소간 고객유치 경쟁심화, “퇴폐적 쇼” 등 퇴폐영업 증가
- 무허가 업소의 심야영업행위 증가

○ 10대 청소년 불법고용

- 10대 접대부의 고용증가 및 이로 인한 청소년 가출 등 탈선사례 급증 소지
- 청소년들을 속칭 “빠끼”로 고용하는 사례도 증가

○ 10대 청소년 상대 불법 유흥영업

-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불법출입 묵인
- 청소년 사회에서의 향락문화 확산

Ⅲ. 지시사항

1. 소관부처별 「특별대책」 수립·시행

- 각 부처별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
- 부처간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유기적 협조

2. '99. 3. 1.~3. 31. 1개월간 일제 특별단속 실시

- 기간 : '99. 3. 1.~3. 31. (1개월간)
- 소관 기관별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일제단속 실시

3. 중점 단속대상

○ 심야 치안저해 및 문란행위

- 유흥업소 중심, 각종 폭력 등 범죄행위
- 취객들을 상대로 한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 유흥업소 이권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 취객들의 질서문란행위 등

○ 심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 취객들의 심야 음주운전
-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

○ 퇴폐·변태영업

- 단란주점, 카페, 노래방 등의 불법 접대부 고용 및 변태 영업 행위
- 업소간 고객유치 경쟁심화 “퇴폐적 쇼” 등 퇴폐영업 행위
- 무허가 업소의 심야영업 행위 등

○ 10대 청소년 불법 고용 행위

- 10대 접대부 고용 행위
- 청소년들을 속칭 “빠끼”로 고용하는 행위 등

○ 10대 청소년 상대 불법 유흥영업 행위

-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불법출입 목인 등

○ 10대 청소년 불법고용 알선행위

- 속칭 “보도방” 등의 불법취업 알선 등

○ 단속공무원의 불법영업 목인행위

- 유흥업소 불법영업 목인행위 및 대가 수수행위 등

4. 불법 영업행위 등 처벌강화

○ 교차·반복단속 철저 실시

- 시·군·구 또는 경찰서간 교차단속 실시로 업소와의 유착의혹 제거
-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주요감시지역으로 지정, 반복 단속 등 특별관리

○ 형사처벌 철저

- 예외없이 형사입건
- 속칭 “바지사장”등을 고용한 실제업주 끝까지 추적, 색출
- 가급적 법정 최고형 구형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 단속기관은 적발 즉시 유선 또는 팩스를 통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
- 행정처분기관은 지체없이 엄정한 행정처분 실시

○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퇴폐·변태영업을 하거나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득 환수
- 단속기관은 세무서에 불법영업 사실 통보

5. 학생 등 청소년 교육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

- 학교 인성교육 강화 및 특별교육 실시 등으로 청소년들의 향락·유해업소 유입을 사전에 차단
- 심야 유흥업소 주변의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IV. 행정사항

1. 특별단속결과 보고

- 소관부처별 특별단속 실시결과를 '99. 4. 15.까지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제출

2. 「중앙점검단」의 전국 현장점검 실시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중앙점검단을 전국에 파견, 수시로 관계기관의 대책 시행사항과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
- 점검시 발견되는 불법영업 사항은 단속기관에 즉시 통보